

6. 13 지방선거 부천시 사회복지정책 제안집

6.13 지방선거 부천시 사회복지정책 제안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13)를 맞이하여 부천시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현안을 정책화하여 후보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함.

*참여단체: 부천다문화네트워크, 부천시노인복지시설, 부천시문해교육협의회, 부천시사회복지관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시사회적경제협의회, 부천시장애인복지시설, 부천시정신장애인복지시설,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지역자활센터연합회,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부천시청소년관련기관 (가,나,다 순)



목 차

■ 5대 공통의제

I. 부천시 사회복지네트워크 거점 공간 확보	3
II.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위한 순차적 종사자 처우 개선	4
III. 부천형 사회주택 건립 추진	7
IV.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9
V.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11

■ 분야별 의제

(가,나,다 순)

I. 노인복지 분야	13
II. 다문화 분야	19
III. 문해교육 분야	23
IV. 보건의료 분야	24
V. 사회적경제 분야	27
VI. 아동복지 분야	30
VII. 자활 분야	35
VIII. 작은도서관 분야	38
IX. 장애인복지 분야	41
X. 정신장애인복지 분야	45
XI. 지역사회복지 분야	47
XII. 청소년 분야	55

■ 참여단체 현황

[별첨] 참여단체 현황	61
--------------	----

5대 공통의제

- I. 부천시 사회복지네트워크 거점 공간 확보
- II.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위한
순차적 종사자 처우 개선
- III. 부천형 사회주택 건립 추진
- IV.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V.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제안1

부천 사회복지네트워크 거점공간 확보(복지허브센터 운영)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습득이 용이하고 이용 접근성이 높아야 함. 또한 지역에서 나오는 복지욕구와 관련한 생생한 목소리가 지역사회의 고유한 정책으로 진화해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삶 또한 풍성해질 것임.
- ◇ 부천시의 경우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유관기관들이 지역과 결합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공통의 소리로 담아내고 보다 많은 자원과 정보력으로 개별 기관들을 지원해야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지역사회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존재하는 실정임.
- ◇ 보다 큰 틀에서 부천의 복지를 조망하고 진단하며 진일보한 정책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네트워크 기반이 필수요소임. 이에 사회복지네트워크 거점공간 확보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부문별 조직들과 지원조직들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이 촉진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이 연결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 아울러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일상 속에서 빈번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다채롭고 창의적이며 부문별 틀 안에 갇힌 사고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시도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제안내용

1. 부문별 사회복지 지원조직들이 일상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역복지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거점공간 확보 운영(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사회적경제협의회,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 직능별 협회 등)
2. 향후 확보된 공간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및 시민동아리 학습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

제안2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위한 순차적 종사자 처우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부천시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방식은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따라 예산을 각각 지급하는 항목별 보조금 지급이 아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위탁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보조금 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음. 부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하는 일정금액의 포괄보조금은 운영비, 사업비는 차치하고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¹⁾ 금액이며, 인건비 부족은 종사자의 이직이나 기관별 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대다수는 운영시설마다 적정 인력에 대한 표준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천관내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전 영역이 이 같은 표준 인력 수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결국 위탁받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부족한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담까지 떠맡은 형국임.

이 같은 상황으로 야기되는 주요한 문제로는 첫째,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적절하게 보상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향상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그나마 종사하는 인력도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임. 두 번째로는 시설마다 임금 체계가 달라²⁾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라도 어느 영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발생해 스스로 자괴감을 갖거나 일정 영역으로의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됨. 세 번째로는 처우개선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근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개발과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어렵게 하여 부천시 복지수준의 저하와 서비스 필요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됨.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임금체계 현실은 분야별, 직능별, 사업종류별, 지역별로 각각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종사자간에도 각각 임금체계가 달라 소외된 종사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결국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내 발전가능성을 저해함으로 숙련된 인력의 개발과 유지에 제약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같이 부천시도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합리적이고 현실화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실천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음.

최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안)를 단계별로 연구하여 추진하고 있음. 2017년 현장의견을 수렴, 처우개선 범위 및 계획을 수립하고

- 1)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외부인의 경우 시 보조금을 민간위탁시설에서 인건비로만 쓰고 있다고 오해하게 됨.
- 2) 사회복지관의 경우 경상보조금 2015년 동결, 2016년 1.2% 삭감, 2017년 및 2018년 삭감으로 동결.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공공요금, 및 각종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운영에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회복지 이용 및 생활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못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경우 예산 동결 및 경기도 보조금 집행기준(전체보조금 1억2천만원 중 8,640만원만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사회복지 이용 및 생활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예산 수립은 불가능하고, 각종 경력인정 또한 어려운 상황이며, 법인 전임금이나 후원금의 보조로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2018년에 시, 군 합의를 통한 채용 마련과 처우개선비(임금수준)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단일임금체계(안)의 도입은 지역별 차이가 심한 경기도의 특성상 시, 군 간의 합의나 선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로 인해 빠른 시기에 적용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의 조기 적용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단계적인 지원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되는 처우개선비³⁾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0천원(도비 100%)씩 지원되고 있음. 하지만 특수근무수당⁴⁾(도비지원 0~100% 시설별 상이)의 경우 표(지원대상 시설 및 지급액) 참조 5년 미만, 이상에 따라 50천원 ~ 290천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종합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은 지원)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이에 부천시의 경우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공통의 수당을 신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의 정책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시설 간 차이를 좁히는 작업, 이후 전체적인 임금기준의 상향화와 시설별 표준인력 도입 및 적정 인력 배치, 안정적 근무환경의 구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제안내용

1. 부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신설

-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수당(매월 10만원)을 지급하여 인건비 수준 향상 도모
- 우수한 사회복지 인력의 유출을 줄이고, 부천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 모색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위한 경기도 단일임금체계(안) 추진 시 적극적인 채용 확보 명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연대임금을 지향하며, 종사자의 규모, 경력이 모두 반영되는 단일임금체계(안) 추진에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

3)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경기도 복지정책과) 제1장 처우개선비

4)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경기도 복지정책과) 제2장 특수근무수당

〈표- 특수근무수당 지원대상 시설 및 지급액〉

도 담당부서	시설종류	지급액(천원)	
		5년 미만	5년 이상
복지정책과	노숙인자활시설	100	150
	노숙인재활요양시설	240	290
	노숙인일시보호소	100	15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0	150
사회적일자리과/ 사회복지담당관	지역자활센터	100	150
	노인일자리전담기관	100	150
노인복지과/ 사회복지담당관	노인주거복지시설	150	200
	노인의료복지시설	150	200
	노인복지관	100	150
	노인보호전문기관	100	150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200	25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00	25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00	25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00	1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0	150
건강증진과/ 보건위생담당관	정신요양시설	150	200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150	200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100	150
	정신재활시설 중 종합시설(이용, 생활)	100/150	150/200
여성권익가족과/ 가족복지담당관	일반지원시설	200	250
	외국인여성지원시설	200	25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00	25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	25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	250
	모자가족복지시설	150	2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50	200
	일시지원복지시설	150	200
	자활지원센터	50	50
	성매매피해상담소	50	50
	성폭력피해상담소	50	50
	가정폭력상담소	50	50
	긴급전화센터	200	250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	100
아동청소년과/ 가족복지담당관	양육시설	150	200
	보호치료시설	150	200
	자립지원시설	150	150
	공동생활가정	150	200
	지역아동센터	100	150
	가정위탁지원센터	100	150
	아동보호전문기관	100	150
다문화가족과/ 가족복지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150	200
보건위생담당관	한센주거복지시설	150	200

제안3

“부전형 사회주택” 건립 추진

제안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4~5%선으로 영국 22%, 독일 20% 등 20%내외의 수준에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OECD국가 평균인 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주거문제해결이 자립의지를 강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삶의 안정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기존의 청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들은 높은 임대료로 인하여 자립적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함. 공공부문의 약간의 지원으로도 자립적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음에도 약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립적 생활에 한계를 만들게 됨.

특히 수급이 아닌 청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 주택 정책에서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청년은 실업에서 벗어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주거가 필요하며, 노인은 노후 생활의 건강한 생활의 공간이 필요하고, 장애인은 자립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자립 주거가 필요하며, 한부모들은 자녀들 양육을 위해 안정적 주거가 필요함. 각 분야에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주거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주거공간에 대해 기존의 주택 정책에서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기에 기존의 공공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인 ‘부전형 사회주택’을 제안하고자 함.

기존의 청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으로 구분된 분리형 주택보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절실한 상황임. 사회통합, 세대통합, 공동체성 강화와 사회안전망 마련의 필수조건인 주거공간의 정서적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됨.

기존의 사회주택은 공공이 민간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여 민간업자는 시중의 80프로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공공주택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의 기회를 제한하게 됨. 기존의 사회주택, 사회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형식을 조합하여 부천만의 ‘부전형 사회주택’을 건립하여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람.

제안내용

1. 취약계층의 독립주거를 위한 ‘부전형 사회주택’ 건립 제안

- 1) 주상복합형 단지로 최소규모 건물면적 1층당 400㎡, 지상 6층(엘리베이터포함)의 “부전형 사회주택” 건립을 제안 (각 층별 40~60㎡ 6~10가구 총 30여 가구 입주(1인 또는 2인 주거))

예시)

각 층	용 도	각 층	용 도
1층	사무실, 취약계층 작업장	2층	창업 준비 공간 3개소
3층	정신장애인 독립주거 입주	4층	장애인 독립주거 입주
5층	노인 독립주거 입주	6층	청년 및 한부모 독립주거 입주

- 2) 입주자격 : 1순위- 수급권자 외 독립주거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청년, 한부모가족
2순위- 차상위 계층, 3순위-수급권자
- 3) 부천시 각 권역별(소사권, 원미권, 오정권) 거점형식으로 3개소 건립추진
- 4) 입주자 임대비는 시중의 50% 이하로 설정함
- 5) 운영투자 방식은
 - 1안으로 부천시가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하는 방식을 우선 추천함
 - 2안으로 부천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LH에서 건립을 하는 방안
 - 3안으로 부천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자가 건립을 하는 방안

제안4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사회 전반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재구성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복지의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 그러나 활발한 재구성 논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각 주체간의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 가치관의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공공정책의 추진 주체나 기존의 정책협의체가 관련 현안의 갈등조정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 사회복지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상호보완적인 역할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은 민간을 지원하고, 민간은 공공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파트너십을 전제로 상호존중의 거버넌스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제안내용

1. 시민과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부천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기 위해 복지현장과 전문가, 시민과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2.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실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참여예산제 도입 필요

제안5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세월호 침몰 사건, 지하철 2호선 충돌사건 등 최근 우리사회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전 혹은 위생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이용자들이 이에 대한 환경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부천시 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 등의 체계적 점검이 필요하며, 30년 이상 노후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에 의거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화재나 화재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배상한도에 대한 기준선이 없고, 부천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배상한도가 낮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음.
- ◇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으로 인해 시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회복지사를 가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것임.

제안내용

1.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부천시 사회복지 안전 조례’ 제정 필요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 실시 및 노후사회복지시설 재건축 추진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자의 안전을 위한 ‘부천시 사회복지 안전 공제회’ 설치 및 운영 필요

분야별 의제

- I. 노인복지 분야
- II. 다문화 분야
- III. 문해교육 분야
- IV. 보건의료 분야
- V. 사회적경제 분야
- VI. 아동복지 분야
- VII. 자활 분야
- VIII. 작은도서관 분야
- IX. 장애인복지 분야
- X. 정신장애인복지 분야
- XI. 지역사회복지 분야
- XII. 청소년 분야

I. 노인복지 분야

제안1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세대공감센터 운영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세대간 갈등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며 그렇다고 현재 갑자기 나타난 문제 또한 아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복지국가나 그렇지 않은 나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세대간 갈등은 어디든 존재함. 이는 모든 세대가 공통된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임.
- ◇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아는 것을 넘어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차이를 알면서도 그에 따른 결과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대 갈등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갈 것임. 이러한 세대갈등의 문제는 일회성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으며 세대 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함.
- ◇ 이는 세대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를 통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음. 또한 다른 세대들과의 융화 및 조화는 사회적 배제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어 세대간 갈등으로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제안내용

1. 부천시 관내 유휴공간 파악 및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공감센터 공간 확보
 - 부천시 관내 공공시설, 경로당 등의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리모델링하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2. 지역 욕구조사를 통한 세대공감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도서관, 평생학습, 돌봄, 여가활동, 마을축제 등 지역의 세대구성과 특성에 맞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3. 세대공감센터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공유
 - 세대공감 관련 수행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공유와 함께 발전방향 논의

제안2

노인친화형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개발 및 확대 운영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노인일자리란 지난 10년 넘게 시행되어 오면서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어 왔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임.
- ◇ 내용의 단순성, 획일성 등이 나타나고 현상 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경륜전수활동과 같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세대에 전달하는 사업도 있지만 활동의 상당 부분이 비교적 단순하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음.
- ◇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노인일자리 개발과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노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노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틈새형 활동 등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 내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제안내용

1. 노인일자리 지역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노인일자리 생태계란 노인일자리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유기적 환경체계로 노인일자리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의미함. 특히 공공분야의(공원, 도서관, 체육관, 공공시설 등) 시설경비, 청소용역 등 노인일자리사업과 공생·공존 필요
2. 노인들에게 적합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공공부문 틈새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확대 필요
 - 소공원을 포함한 공원관리사업 전면 확대
 - 공영주차장관리사업 운영
 - 골목길 청소사업 운영 등
3. 더불어 공공부문의 공간 무상임대와 공공건물 신축 시 노인일자리 창업 공간, 기업연계형 노인공장(OEM)으로 규모화된 쾌적한 작업 공간 필요
4. 노인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노인일자리란 다른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다는 인식이 아닌 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틈새형 일자리 참여라는 인식의 확산과 노인생산물 우선 구매 요청
5. 노인일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임.

제안3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부천시 치매관리체계 구축

제안배경 및 필요성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을 기준으로 708만명,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고 이 수치는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명으로 예상됨. 경도인지장애환자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7%에 해당하며 2015년 기준으로 184만 7,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부천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접근과 동시에 65세 이상의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구분	65세이상 노인인구수	65세이상 추정 치매		65세이상 추정 경도인지장애		비고
		환자수	유병률	환자수	유병률	
전국	6,624,120명	648,223명	9.8%	1,846,857명	27.9%	부천시 추정치
경기도	1,280,076명	122,258명	9.6%	354,357명	27.7%	
부천시	93,574명	9,170명	9.8%	26,107명	27.9%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부천시는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에 앞서 부천시 보건소, 오정보건센터, 옥길동 100세 건강실 등 3곳에 임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고 100세 건강교실 9개소 운영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명찰) 보급하고 있음. 향후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통해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과 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미·소사·오정 권역에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2018년 상반기 중 소사권역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할 예정임.

- 치매에 대한 접근은 치매예방과 치매인의 안락한 생활 보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가 융합되어 설계되어야하나 보건, 의료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학제·다분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
- 현재 관내 100세 건강교실, 보건소, 부천시립병원,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서 이동능력 내지 보행능력이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해 거동이 제한적이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존재함.
- 100세 건강교실, 치매안심센터 3개소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 설립만으로 치매어르신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를 지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엔 역부족일 것임.
- 현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자원(특히 공식적 자원)과 전달체계를 확인·정비·보완하고, 이들에게도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부천시의 치매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치매돌봄과 밀접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및 보장성 확보와 체계적인 기관·인력에 대한 관리, 민간자원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됨.

제안내용

1. 치매돌봄에 대한 보건·의료·복지·요양의 필수적 결합 및 이외의 다학제·다분야의 연계가 강조된 부전형 모델 마련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상시 운영
2. 경도인지장애가 예상되는 어르신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한 방문형 치매예방 서비스를 확대 및 활성화
 - 기존의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등에 치매예방사업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방문형 치매예방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100세 건강교실, 치매안심센터, 관내 사회복지자원이 빠져나갈 수 없는 치매예방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3.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전형 치매 전문 공립 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치매돌봄에 대한 부전형 모델을 마련하여 치매 관련 장기요양서비스 질적수준 제고

제안4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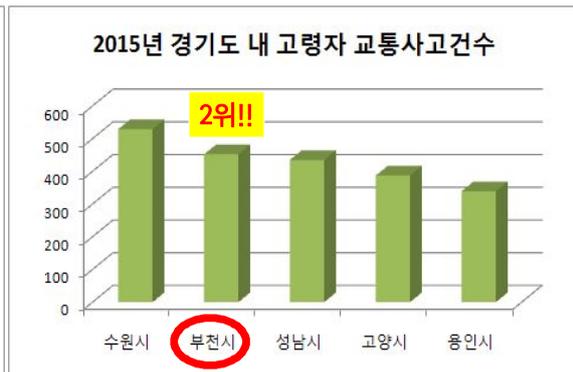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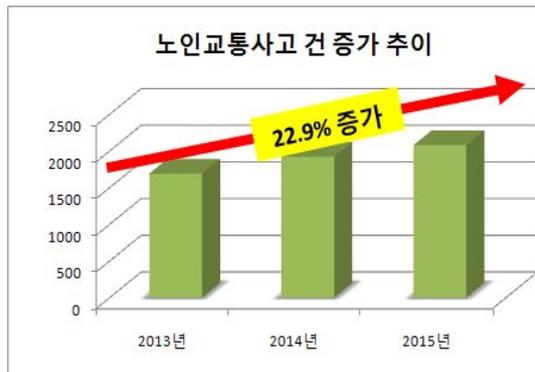
제안배경 및 필요성

노인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2016년 35,761건, 1,732명의 사망자와 38,4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또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도 2016년 11,431건, 866명이 사망하고 10,693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부천시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부문별 노인 교통사고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385건이 발생하여 15명이 사망하고 37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상자 177명, 중상자 167명으로 총 379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사고유형별 노인교통사고(차대 사람 사고) : 부천시 5)

구분	합계	차대사람					
		합계	횡단중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보도통행중	기타
발생건수	385	172	104	10	15	9	34
사망자수	15	11	8	0	2	0	1
부상자수	379	161	96	10	13	9	33
중상자수	167	101	69	4	6	7	15
경상자수	177	51	25	6	5	2	13
부상신고자수	35	9	2	0	2	0	5



지난 2016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도내 교통약자의 보행현황 및 안전대책 추진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경기도내 노인 교통사고는 1,692건, 2014년 1,923건, 2015년에 2,080건으로 최근 3년 간 22.9% 수준인 388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횡단 중 사고(38%)가 가장 많았고, 차도 통행 중 사고(8%), 길가 가장자리 사고(6%) 순으로 확인됨. 또한 경기도 지역별 분석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3년 간(2013~2015년) 수원시가 529건으로

5) 도로교통공단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6년 사고유형별 노인 교통사고

주) 1. 노인은 65세 이상임 2. 부상자수는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의 합계

사고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부천시가 452건으로 경기도 내 2순위로 고령자 교통사고율이 높았음. 전국적으로 670곳에 노인보호구역이 존재하며, 경기도 내 100여곳의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지정되어 있음.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국가로부터 50% 지원이 있으나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기에 1곳에 5천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노인보호구역내 통행속도 제한(시속 30킬로미터) 미준수,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상황에 있음. 201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노인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를 2배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단속, 계도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임.

제안내용

1. 관내 노인보호구역 신규 설치를 통한 어르신에 안전한 거리 조성
 -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2. 노인보호구역내 속도 위반,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확대
3. 노인보호구역 관련 조례, 규칙 등 마련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반적인 도시정책과 법규, 조례,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종합적 진단 및 재정비

Ⅱ. 다문화 분야

제안1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는 경기도 내 외국인 이주민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이며, 앞으로 더 많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부천시에 거주하며 제2의 고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 전체적으로 다문화 국가체제로 변화하고 있고 개방적이고 관계중심적인 공동체 사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상황임.
- ◇ 이렇듯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수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의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이 지자체 단위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주요한 과제가 되었음. 더 이상 선택적인 부분이 아닌 필수적인 주민지원사업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방식으로의 적응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즉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확산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
- ◇ 현재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업활동은 주로 제조업이나 생산업에 국한되어 있음. 그러나 단순 노무나 육체적 활동에 집중되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고 이로 인해 이들의 잠재된 기술이나 학습된 경험치들을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손실이 있음. 이에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양한 직업교육이 가능한 접점을 마련하고 이들의 재능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을 것임.

제안내용

1.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직업 탐색의 기회와 체험이 확대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2.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직업의 전문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제안2

부천 다문화네트워크 지원 방안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 다문화 네트워크는 시민사회단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동복지회관, 경기글로벌센터, 한국펄벅재단,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등 다양한 단체들의 종합적인 연대구조임. 이는 지역사회에서 특정 영역에 외국인 이주 및 근로자로 참여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임.
- ◇ 또한 이주민의 거주형태와 연령, 사회적 인식이나 참여 등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이는 당연한 인권 측면에서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 부천시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단체들의 활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고, 그 실천과정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들은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사실상 초기의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들은 민간 사회단체나 개별 기관들이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임. 이제는 부천시 차원에서의 이들 단체들 간의 연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중심의 실천들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제안내용

1. 부천시 다문화축제를 부천시민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부천시 대표축제 중 하나로 지원 확대
 - 부천시민과 부천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축제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함.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
 -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강화하여야 함.
3.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및 상담과 심리정서지원센터 필요
 -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의 가족구성원을 살펴보면 재혼가정은 기본이고 재재혼가정도 많으며 아울러 원처 않게 이민을 당한 아동·청소년들도 많아 이들의 교육과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음.
 -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의 주인공 제2의 조승희 군과 같은 마음에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글로벌아동청소년 상담 및 교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함.

제안3

이주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미래교육 사회 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이주 여성과 이주 아동들을 미래사회 자원으로 준비하도록 장단기 지역사회 계획수립이 필요함.
- ◇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등 지역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육체노동이나 단순 업무에 한정된 참여는 기술집약적이고 정보화된 사회 속에서 한정된 참여로 소외의 문제를 나타낼 수밖에 없음.
- ◇ 이에 글로벌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다문화 도시의 하나인 부천시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개발할 뿐 아니라 이들 이주여성 및 아동·청소년들이 자기개발과 잠재된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이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사회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역량을 키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따라서 이에 맞춰진 교육 정책 변화가 필요함.

제안내용

1. 이주 여성들의 자격 취득을 위한 방안 마련
2. 다문화 가정에서의 이중언어 생활환경 마련과 지원 정책
3. 어린이집과 유치원, 나아가 초등학교에서의 특성화 교육 지원 정책
4.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역량 강화로 다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제안4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장기간 모국과 가족 친지들과 만나지 못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음.
- ◇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습득하기도 전에 취업함으로써 의사소통 곤란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겪고 있음.
- ◇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한국에서의 조기적응을 유도하고 원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향후 원주민과 결혼이주민 등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제안내용

1.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 시기 : 매년 1회
 - 인원 : 외국인 10명
 - 내용 : 다문화가정 10가정 선정, 항공료 지원
2. 다문화 민간사업비 지원
 - 시기 : 연중
 - 대상 : 세계인의날 행사, 다문화 축제 등

Ⅲ. 문해교육 분야

제안1

부천시 성인기초 문해교육 발전 방향 제안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부천시 성인기초문해교육 잠재수요자(저학력 성인)현황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전체인구 (20세이상)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중학교 잠재수요자	합계 (잠재수요자 비율,%)	
경기도	9,360,325	271,174	640,623	911,797	9.7%
부천시	658,676	18,554	45,240	63,794	9.7%

◇ 200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부천시 성인기초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총액이 연 7천만원~1억 3천만원의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1)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1명당 연 1,500원(1억원 ÷ 63,794명)

2) 문해교육 프로그램 1학급당 2,000,000원(15개 기관 50여 학급), 1명당 연 50,000원

◇ 부천시는 2006년~2008년까지 상향 지원하다, 2008년~2018년 10년 동안 동일한 금액의 예산 지원으로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반면, 국가뿐 아니라 인천시나 서울시, 시흥시, 용인시, 하남시, 동두천시 등의 인근지역들은 문해교육에 대한 발전을 위한 지원액이 꾸준히 늘고 있음.

◇ 부천시의 저학력성인 및 교육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지원을 위해서는 문해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전문적 소양을 갖춘 문해교사 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부천에서 성장한 문해교사들이 부천 밖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성인문해 기초교육과정의 한계로 성인문해학습자들의 기초문해력 향상이 더디고 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로 동일한 단계에 머물러 있음.

제안내용

1. 부천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여 개의 기관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연 약 4억, 1개 프로그램 당 240시간×30천원= 7,200천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로 기초문해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학습자의 욕구를 파악한 후에 현재 국가에 제시한 초등문해 3단계, 중학 3단계의 교육과정을 벗어나 부천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성인기초 문해교육과정 개발과 제공으로 학습자들이 머무는 학습이 아닌, 수평과 수직적으로 순환 이동하는 성인기초 문해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

3. 다양한 교육과정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 부천의 문해교사가 부천시 안에서 문해교육 수업에 집중하며, 연구개발 활동에 주역으로 참여하도록 부천시 문해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함.

IV. 보건의료 분야

제안1

주민참여형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도시기본조례 개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다음의 내용은 지방분권화 정책과 함께 지방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짐.
 -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 정부와 국민의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예방활동, 의료복지 통합을 위한 부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의 개정 필요
 - 문재인케어를 통해 정부의 일차의료강화의 의지가 확인되고 정부주도의 보건사업 영역에서도 ‘주민참여’는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 공동체기반의 보건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돌봄체계가 반드시 필요함.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장애인주치의 등의 실현, 돌봄시스템에서의 의료복지 통합적 모델 개발해야 함.
 - 부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에 구체적인 지역단위 실천구조의 확립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안내용

1. 부천시는 현재 건강도시기본조례가 있으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2. 건강정의, 건강증진, 주치의, 건강도시적 요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건강 환경 기반 마련 및 주치의제도 실현에 대한 내용 보충해야 함.
3.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함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기반의 <지역주민 건강기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바임.
4. 근거사례는 2017년 11월 시행된 <경기도 건강관리 기본조례>에 경기도건강위원회 운영, 환자 권리 보장 ombudsman 운영, 주치의 사업,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됨.

제안2

존엄한 삶의 도시를 만드는 지역 웰다잉 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죽음에 대한 문화와 태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 : 개인, 가족,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남.
- ◇ 가족 파괴, 공동체 파괴에 따라 삶과 죽음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넘겨지고, 이에 따라 노인들의 자신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도 더 커지고 있으며, 점점 죽음도 ‘돈’의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죽지 않기 위한’ 또는 ‘죽음’을 위한 ‘돈’과 ‘병원비’, ‘건강’, ‘연명’ 등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음.
- ◇ 따라서 노후에도 ‘여유로운 삶’과 삶에 대한 성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로, 미리 이러한 대비를 못함으로써 노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희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연명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자신과 가족이 함께 힘들어지고 결국 자신도 존엄하게 삶을 마감기 어렵게 됨.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입법화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도 입법의 취지를 살리고 현실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안내용

1. 웰다잉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시민교육, 학교, 성당, 교회, 사찰, 공공기관, 복지시설, 마을공동체 등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 상담, 교육, 캠페인, 소모임 활동, 학습 모임을 진행
2. 웰다잉 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확립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보제공, 상담(법률, 의료 등 전문상담, 가족상담 등), 교육, 문서지원, 정보 보관 등
 - 협력 의료 기관, 노인 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요양원, 주민센터, 재가복지센터 등 협력 기관들 간의 협업
 - 법률자문, 의료지원, 긴급지원, 상담지원, 입법전문가 연계 지원
 -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3. 웰다잉 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립
 - 전문활동가 양성 : 웰다잉 교육가, 호스피스
 - 현장 웰다잉 활동가: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자원활동가 : 노인복지시설, 병원, 동복지협의체 어르신 자원봉사자, 생협조합원등
 - 일반 시민 활동가: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시민, 평생교육사, 학부모 등

V. 사회적경제 분야

제안1

사회적경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 과별로 상이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연계·조율할 광역 통합 조정·협의 기구 필요
- ◇ 사회적경제의 각 분야마다 지원·육성 정책내용 등이 상이하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사회·경제 문제등을 해결하는 사회적목적 추구라는 측면에서 큰 틀의 범위인 사회적경제로 통칭됨.
- ◇ 부천시 국 및 과간의 칸막이로 인하여 사회적경제를 대상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정책 지원이 발생하고, 정책의 편차가 심화되는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책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
- ◇ 민·관 공동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정책방향 결정, 사업 추진 등 실행적 기능과 위상을 갖춘 수준의 기구 구성이 필요

제안내용

1. 부천시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 또는 민·관정책협의체 등의 정책협력 거버넌스를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각 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합·조정
2. 거버넌스 기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발전) 기본계획 수립
3. 거버넌스 기구의 실행적 기능 연계와 각 부서별 통합 정책 조율 등을 위하여 거버넌스의 간사 역할을 과의 팀장급에 부여
4. 민·관 공동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기구 구성
5. 민간의 자율성·주도성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성 시 일정 비율(과반수 등) 이상의 민간 참여 보장
6.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거점 공간 필요

제안2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지방자치분권 준비를 위해 주민 참여형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성화 필요
- ◇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동은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의식 강조를 토대로 지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구성원 결집 및 연대를 확고히 하여 지역의 가치에 기반한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주민들의 사회적경제 공동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나 기초지자체별로 상이한 이해도·전문성 수준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필요
- ◇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짧고 국가 수준의 정의도 확립하지 못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기초지자체별로 이해도와 전문성 수준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민관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저하되어 사회적경제의 지역 정착에 어려움 존재하므로 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이 필요
- ◇ 또한 주기적 부서이동으로 인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사업·지원의 연속성이 저하되어 적정기간 동안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

제안내용

1. 사회적경제 주민 공동체 조성·지원
2. 주민들이 민·민 거버넌스,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주민 공동체 활동·학습을 조성하고 지원
3. 공무원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전담공무원 장기간 배치
4. 공무원 연수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담당자와 사회적경제 부서 담당자에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및 전문교육 실시
5. 사회적경제 부서에 전담공무원을 장기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

제안3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사회적경제기업 영역에 사회·경제 문제 해결 등의 사회혁신을 위한 인내자본 필요.
-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인해 시장경쟁력·생산력·이익창출이 저하되는 등 경영적 손실 발생.
- ◇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일반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구조나 규모가 일정 궤도에 오르는 단계까지는 인내 자본이 요구되며, 인내 자본 형태로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 경로 확충 필요.
- ◇ 지역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재원의 다양한 경로 확보.
- ◇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의 규모화 및 운용 체계 마련을 위해 당사자, 지역정부, 지역기업, 지역금융 등의 다양한 기금재원 확보 필요.
-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체계가 불비한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금융 기반을 마련하여 자생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내용

1. 지역의 주요 사회적 의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공동 협력·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형 공동협력기금을 설치·조성·운용
2. 재원 조성은 개인 기부·신탁, 지방정부·지역기업 출연, 지역주민·사회적경제조직 출자 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또는 자본 형태의 자금조달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운용(개인 기부, 지역기업 출연 등에 있어서는 세제 혜택 부여)
3. 기금 운용 시 재무적 성과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사회성과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지표)을 마련하고, 별도의 운용기관을 설치
4. 지역정부의 기금 출연 규모는 지자체 연도별 예산금액의 0.2%이상이 되도록 목표금액을 설정
5.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 역량을 강화
6. 지역의 사회문제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Impact Bond)을 발행·확대하고,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등을 시도하여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 투자 금융을 활성화하는 체계를 마련
7.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가 재무적 손실을 초래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회성과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재무적 보상 또는 판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영역에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며, 사회문제 해결 양과 범위를 확장

제안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
- ◇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재무적 손해를 감수하는 경영상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판로지원이 필요

제안내용

1.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확대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 조례,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3.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확대하여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장 도모
4. 공공기관 내 사회적경제 매장(카페·매점·복합매장) 설치 유도 및 지원
5. 학교내 협동조합 매장 설립·운영 지원 - 공공기관 근로자 및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이용을 통한 사회적가치 인식 제고 및 윤리적 소비 의식 강화

제안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위상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가 2012년부터 운영 중이나,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 신분 및 역할이 정립되지 못함.
- ◇ 위상 약화에 따른 생태계 선순환 유도 및 조성에 어려움 존재,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저변확대 및 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제안내용

1.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센터의 직원 신분을 확고히 하며, 지속적인 지원업무가 가능하도록 정규직 전환
2. 중간조직에게는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ex)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사무국

VI. 아동복지 분야

제안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지역아동센터는 법제화 14년의 역사 속에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복지시설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 ◇ 하지만 2012년 11월 24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 중 유독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만이 사회복지 이용 및 생활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못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어 사회복지 시설 중 가장 열악한 종사자 처우 현장으로 지난 14년간 낙인되어 왔음.
- ◇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복지 서비스 책무 역시 타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대비 현저히 낮으며,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출은 국외, 국내 가장 열악한 상황이기에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상황임.
- ◇ 2016년 12월 전국 실태조사 결과 전국 4,107개소가 운영 중이며, 9,379명의 법정 종사자가 106,668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음.
-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 등 아동 돌봄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시설장은 아동복지 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구비하여야 함.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 아동복지 관련 전문 인력임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권고하는 급여기준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4급 고용직』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처우개선이 시급함.

제안내용

1. 『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포함 및 적용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포함 및 적용
2. 종사자처우개선비의 인상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에 책정된 처우개선비를 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인상

* 처우개선비 지원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미만 종사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5년이상 종사자	15만원	25만원	25만원	25만원	25만원

* 처우개선비 인상 요구안

	2019년	2020년	2021년
5년미만 종사자	25만원	30만원	35만원
5년이상 종사자	30만원	35만원	40만원

제안2

아동국 신설 (보육-아동-청소년 부처 통합)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아동관련 정책, 행정, 복지서비스의 한계
: 연령 및 집단별 사업 불균형, 부처별로 다양한 전달체계를 운영하여 통합연계조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됨(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 2015;18).
- ◇ 발달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개발-연계-추진을 위해서는 부천시 자체적으로 ‘아동국’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가 분리되어 있어도 지자체에서 통합부서를 운영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음.
- ◇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24세까지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찰하면, 부천시의 아동정책은 아동이 부천지역에서 건강하게 청년(사회인)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에 애착과 안정감을 느끼고 성인이 된 후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부천시가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설계한다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다시 지역사회 기여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이는 현재의 칸막이 행정 구조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통합부처를 중심으로 부서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구조적 해법’을 가장 먼저 실천할 필요가 있음.

제안내용

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통합부처 ‘아동국’ 신설
2. 출생(모자보건)부터 아동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으로 성장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일관된 정책체계 마련 : 부천시 고유의 ‘핵심역량사업’으로 정립
3. 정치적 이해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장기계획 ‘부천시 아동전략’ 수립

제안3

No one left behind (1)

아동-가정 위기징후 분석을 위한 통합DB구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아동복지 분야에서 해결이 시급한 최우선 과제는 ‘아동위기’ 문제라 할 수 있음.
- ◇ 문제가 발생한 후에 구조된 위기사례를 고찰하면, 아동이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당했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생애적 손상을 입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이 힘든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예방비용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 현재 아동청소년복지에 다양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꾸준히 위기가 발생한다면 현 전달체계가 ‘대응요법 또는 사후개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음.
- ◇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아동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면, 출산장려정책뿐 아니라 태어난 아동 모두를 한명도 놓치지 않는 ‘No one left behind’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사각지대와 다름없는 아동위기를 예방·조기대응 할 통합솔루션 체계는 필수적임.
- ◇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사례에서 위기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더불어 위기별 특성(지속성, 심각도, 영향요인 등)을 면밀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 현재 사회통계 방식으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자살, 가출, 학대, 폭력 등 특정상황에 대한 분절적-단편적 통계로 존재함(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의 부재).

제안내용

1. 아동-가정 위기사례를 구조적으로 입력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DB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제거 후 ‘PIE체계’ 등을 활용해 구조화된 데이터로 축적
2. 관내 아동이 생애주기별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어떤 위기들이 중첩되는지 등에 대한 총괄적 분석과 이해를 목표로 사회과학 연구프로젝트 수행
3.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징후를 정기적으로 탐색하고 사전에 발견하는 ‘예방점검 시스템’ 및 조기에 개입하여 대응하는 ‘아동위기개입 통합솔루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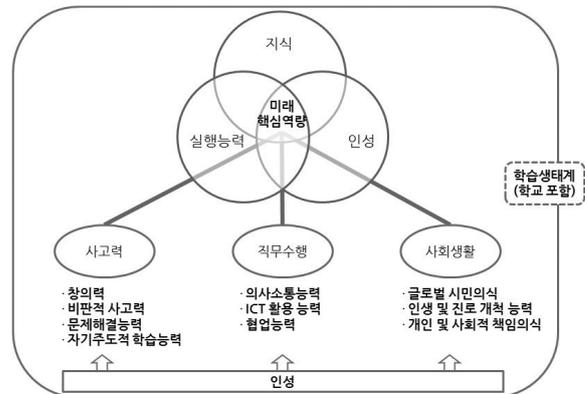
제안4

No one left behind (2)

아동기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근래 4차 산업혁명과 향후 사라질 직업 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런 미래의 변화는 미처 준비하기 힘들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집중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 한편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나듯 한국사회는 권위적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며, OECD 국가 중 최장근로시간과 임금차별심화로 노동착취우려가 높고, 기회주의·소비자본주의 문화 속에 정신적 황폐함(자살률)과 공동체성의 붕괴가 대두되는 상황임. 또한 사회적 갈등을 주로 ‘힘의 대결’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 이런 폭력적 문화와 산업사회에 익숙한 기성세대가 예측하기 힘든 미래문제에 대응하고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넘어 초월적 협력을 성취할 수 있을지 의문임.
- ◇ 만약 촛불혁명을, 민주화세대가 권위주의세대를 넘어 역사적 진전을 만든 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다가올 미래변화도 다음세대가 스스로 열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N포세대 현상처럼 현시대의 난제들이 미래세대의 진전을 막고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위와 같은 한계들 속에서 미래세대를 해방시킬 ‘사회적 이상, 그 지난한 과정을 이겨낼 핵심역량’을 정리하고 변화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은 기성세대의 책무일 것임.
- ◇ 마침 교육 분야에서 핵심역량, 해방의 교육을 탐구주제로 다루고 있어, 그와 관련된 논의내용이 본 사업에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림1] 미래핵심역량의 구성요소(김학한, 2016)

제안내용

1. 교육청 및 민간전문가 협력을 통하여 ‘아동기 핵심역량 지원’에 대한 부천시 전략 수립
2. 중장기적 안목에서 ‘문화적 개입’을 통한 점진적 변화 추진(안)
 - : 본 사업을 **부천시 고유의 브랜드(특화사업)**로 지정 -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전시회, 체험행사, 캠페인, 문화제 등 창의적 접근으로 부천시 이미지로 상징화
 - : 아동기 핵심역량에 대한 아동·시민들의 다양한 접촉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합의**를 구축
 - : 평생교육 차원의 접근 및 교육청 협력으로 공교육, 방과후교육에 반영 등

Ⅶ. 자활 분야

제안1

저소득층을 위한 치아건강증진사업 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치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소화불량, 음식물 섭취의 어려움에 따른 영양불균형, 치아소실로 인한 외관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됨. 이에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과도한 치과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자활사업 참여자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율이 적지 않은 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진료에 수반되는 경비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동일한 수준임.
- ◇ 저소득주민의 치아건강을 위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의료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쉽게 접근가능한 지역내 보건소와 관련한 사업은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관리 등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실질적인 치과문제를 안고 생활하는 저소득 주민과의 연결성이 적고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⁶⁾ 보다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해야하는 만 65세 미만 저소득 주민에게 치과치료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자리잡고 있음.
- ◇ 민간기관 자원연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보를 확인해보았지만 저소득 주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비를 지원해오던 스마일재단, 이랜드재단 공모사업마저 중단되었으며, 경기도의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사업은 제도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만65세 미만 저소득 주민에게 연계 가능한 자원이 부족함은 분명함.
- ◇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을 준비하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상당수가 치아부실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부천시 만65세 미만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살펴본다면 더욱 많은 시민들이 관련된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 추정됨.

제안내용

1.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치과진료소 운영 방안
(보건소 내 치과진료소 활용 / 일부 본인부담률 경감)
2. 부천소재 치과의사회 등 관련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치료비지원
(예: 2017.11.30. 의왕시-치과의사회 저소득층 치료지원 업무협약)

6) 완전틀니,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유지관리에 대해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함.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또한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2개까지 본인부담 1종 20%, 2종 30%기준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제안2

자활사업을 위한 무상 공공 임대 시설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지역자활센터는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참여자의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일구어나가는 핵심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음.
- ◇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에게 자립의지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직무·소양교육)이 수반되어야 하고 아울러 저소득취약계층에 전반적으로 팽배한 우울증, 불안 및 자신감 하락 등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운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2018년부터 지역자활센터는 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센터별 평균 약300명 이상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과 상담의 역할이 부가되어 이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간적인 충족이 필요한 상황임.
- ◇ 지역자활센터의 공간확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2017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내 33개 지역자활센터 중에서 13곳이 지자체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운영되고 있음.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기도하나 월임대료 받기를 희망하는 임대인의 요구에 맞지 않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전세권설정을 하는 등의 불편함으로 임대인이 사업장을 내주는 것을 거절하는 사례는 매우 빈번함.
- ◇ 상담실과 교육장, 그리고 사무실 등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약 300㎡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임대보증금을 자활기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월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 실제로 여전히 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중 60% 정도는 상가건물 유상임대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많은 비용의 월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음.
- ◇ 특히, 월세임대는 계약기간 갱신시마다 보증금 및 월세 인상요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 이전을 피할 수 없으며 이전시 이사비용을 포함한 인테리어 및 교육장비 설치 등의 제반비용 부담이 상당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은 기관별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평균 인건비 90.5%, 운영비 9.5%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시설비, 교육사업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순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예산 책정조차 하지 못하는 센터가 다수임.
- ◇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인프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과 운영 지원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이 시급한 시점임.

제안내용

1. 교육장, 상담실 등 필수적인 공간마련이 가능한 국·공유지 무상임대 지원
2. 공공기관내 판매 시설의 무상 지원 확대
3. 지역자활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운영비 지원

VIII. 작은도서관 분야

제안1

공립작은도서관 사서 2인근무 체제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도서관 사서 2인근무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01년부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 작은도서관만들기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2001년 공립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함.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있는 공립작은도서관 형태로 부천시지역의 시립도서관 운영체제와 긴밀한 연계관계를 형성하면서 도서운동, 마을내 독서문화조성, 마을내 도서를 매개로 한 주민운동 등 다양한 성과와 발전을 도모함.
- 이 과정에서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립도서관에는 없는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와 지원체계를 처음 2002년부터 확립하고 지켜왔다는 점이였음. 이는 전문인력인 사서의 배치로 인해 마을내 작은도서관이 지속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고, 안정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독서문화조성 노력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
- 하지만 현재 이러한 발전들은 상당부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이는 시대가 변화하고 작은도서관에 요구되는 시민들의 눈높이도 상당부분 올라갔고 경기도, 부천시 등 각 지자체마다의 평가활동으로 요구사항이 몇 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임.

◇ 사서 2인 체제의 필요성(1인 구조의 한계)

-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1명의 사서만이 근무하며, 사서로서의 기본업무인 대출과 상호대차서비스, 작은도서관 운영 및 도서 관리 업무를 전담함.
- 하지만 이와 더불어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독서문화 활동, 도서관문화한마당 행사, 부천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 국제세미나 운영, 부천시 연계 공동사업, 경기도 및 부천시 평가, 수입 및 지출 등 행정적 업무 처리 등도 담당함.
- 이런 과도한 업무를 1인이 전담하다보니 업무 성과는 높아지나 담당인력인 사서의 지속근무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즉, 소진, 업무의 능률 저하로 인한 단기 근무로 업무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제안내용

1. 공립 작은도서관 1개소에 2인 이상의 사서 배치

제안2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 임금 현실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도서관 사서 처우 개선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속의 ‘작은도서관 사서’는 대출·반납 등 도서관 기본 업무 등을 포함하여 ‘지역독서 공동체 형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상적이고 전문화된 독서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독서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사서의 역할 : 대출·반납 / 상호대차 서비스 / 지역주민들의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주제별로 하는 북 큐레이션 / 전문화된 독서 프로그램 개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마을운동, 독서나눔 운동,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시민대학 강좌, 독서동아리 운동 / 부천시와 경기도 연계 독서운동, 캠페인 참여 / 부천시와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활동 / 지역 주민에 대한 연령별 독서 전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 / 지역 독서 활동가 양성 및 운영
- 독서 모임 구성 및 지속적인 연계 활동 / ‘독서’를 기반으로 인문학적 환경 구성 등을 펼쳐고 있음.

◇ 사서 처우 개선의 필요성

- 독서전문가(독서활동가)로서의 적합한 급여 수준 보장 필요
: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의 급여는 상기에 제기된 모든 업무(대출과 상호대차뿐만 아니라 독서프로그램 개발과 부천시 연계사업, 독서운동 등 도서관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립도서관에서 대출업무만을 다루는 사서들과 임금 상에서 차이가 있고 복리적 측면에서도 떨어짐.
: 부천시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는 부천시 도서관 사업의 동행자이자 파트너로서 이에 합당한 급여와 경력인정 등이 필요하지만, 실상 2년전에 처음 호봉체계가 마련되고 경력에 대한 인정범위도 그때 논의되는 등 그 처우보장에 대한 노력이 미비하였음.
- 하지만 그 처우 또한 부천시 생활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기근무자에 대한 경력인정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현재 이들 사서의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이 배제된 상태이며, 시립도서관의 자료실 운영보조 근무자의 기본급 수준에 머물고 있음.

제안내용

1. 연차에 따른 적절한 임금 체계 필요(사회복지사 수준의 임금 체계 마련)
2.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자녀학비수당 등 마련
3. 경력에 따른 경력근무 인정범위 확대, 호봉간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테이블 마련

제안3

공립 작은도서관 평가체계의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도서관 평가체계의 배경 및 필요성

- 부천시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현재 경기도와 부천시에 의해 매년 실시하고 있음. 평가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매년 하반기 바쁜 시기(독서문화사업과 도서관문화한마당 행사 등을 실시하면서)에 평가를 준비하여야 하는 실정임.
- 평가지표의 내용이 공립 작은도서관의 1인 사서가 책임질 내용으로 무리(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연 5회 실시, 상호대차 실적은 월 평균 3,000권이상, 연간대출권수, 월 3,000권 이상, 연간 이용자 수 월 평균 5,000명 이상, 주말(토, 일)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20개 이상, 60회 이상, 공모사업 지원 및 선정 년 3회 및 1천만원 이상, 장서증가량 1,000권이상, 독서 동아리 12회 이상, 홍보 30회 이상 등)가 있음.
- 배점에 있어서도 대출과 상호대차 서비스 실적 점수가 높고(점점 오프라인 이용보다는 온라인 정보망이 강조되는 시대와 맞지 않음), 도서 출판물을 중심으로 한 실적 구성, 공모사업 지원과 선정의 무리한 요구(1인 사서가 이를 개발하고 선정되면 모두 혼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 일은 계속 증가), 신간도서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무상도서로 확보하는 등 장서 증가를 포함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이 많음.
- 주말근무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힘과 충전에 무리가 있음.
-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수와 실시 횟수가 강조되고 있음. 이는 이용자 편의에서 중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력의 보강)가 선행되지 않아 무리가 있음.

◇ 평가지표의 과도한 점검 항목

- 정보자료조직에서 장서개발과 자료조직에 있어 장서구입과 기증자료 확보를 위한 업무/ 독서문화교육서비스 영역에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계획, 운영, 결과보고/ 운영관리의 영역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식지, 시 요구사항, 만족도, 민원업무, 홍보, 홈페이지 관리, 각종 회의, 공문서, 단기근로자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과 관리, 시설 재물조사 및 관리, 환경미화, 보안점검/ 회계관리 영역에서는 보조금 관리, 예산 및 결산, 지출결의, 수입결의, 세금업무, 강사관리/ 대외 업무로는 학교도서관 교류, 평생학습 연계, 경기도 연계 등

제안내용

1. 평가기간을 3년 단위로 조정
2. 부천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TFT 운영

IX. 장애인복지 분야

제안1

중증장애인 일자리 특화사업 추진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많은 노력이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실태는 여전히 열악하며,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실태는 매우 열악함.
 - 2016년 장애인 고용률 36.1%(비장애인 61.0%), 실업률 6.5%(비장애인 3.7%)
 - 2017년 중증장애인 고용률 19.5%(경증장애인 44.4%), 실업률 7.7%(경증장애인 5.3%)

- ◇ 등록 장애인수의 추이 변화는 미미하나 지적 장애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12년 등록장애인 2,511,159명(장애인구 비중 4.9%), 2016년 2,511,051명(4.9%)
 - 2012년 지적장애인 173,257명, 2016년 195,283명(22,026명 증)
 - 2016년 부천시 발달장애인 2,886명(부천시 장애유형 비중 8.1%)

- ◇ 부천시 등록장애인 수는 경기도내 3번째로 많으나 중증장애인 고용대책 미흡
 - 2016년도 등록장애인 35,860명(장애인구 비중 4.2%)로 경기도 평균 4.1%보다 높고 도내 31개 시군구 중 수원시, 고양시 다음으로 3번째로 많음.
 -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은 17,131명(582개소)으로 전국 등록장애인 2,511,051명의 0.68%
 - 경기도 장애인 522,437명의 0.57%, 2,960명(98개소)/ 부천시 장애인 35,860명의 0.34%, 현원 123명(4개소)

제안내용

1.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조기 및 추가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복지·고용·생산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최소 2016년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비율 0.68%에 근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2018년 부천시 0.34%, 4개소)
 - Vision Bucheon 2027 : 2018년 4개소 → 2024년 5개소 → 2027년 6개소
 - ⇒ 2018년 4개소 → 2020년 5개소 → 2022년 6개소 → 2024년 7개소 → 2027년 8개소

2. 부천시 공공장소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카페) 창출
 -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도서관 내 중증장애인 카페 설치 확대
 - ⇒ 2018년 1개소(오정어울마당 내) → 2020년 2개소 → 2022년 3개소 → 2024년 4개소 → 2027년 5개소
 - 부천시 특수학교 2개소, 특수학급 35개소(18개 고), 복지관 등 전문바리스타 양성, 배출

※ 우수참조사례1

광명시 장애 청년들의 일터인 보나카페 9호점 개소(2017.12.14., 에이블뉴스)
1호점 광명시청, 2호점 여성비전센터, 3호점 시민체육관, 4호점 광명장애인복지관, 5호점 광명동굴점
6호점 광명도서관, 7호점 도덕산공원, 8호점 광명보건소, 9호점 차량등록사업소,
총22명의 바리스타 근무, 본 성과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인권상 수상

※ 우수참조사례2

한국장애인개발원 카페 'I got everything' 18호점 개소식(2018.2.1.)
1호점 정부 세종청사점(2016.10.7.) ~ 18호점 파주시청점
꿈앤카페 (I got everything 전신) 12호점 포함 총 30호점 개소
1개소 당 6,000만원 내외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제안2

지역별 거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개설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비장애인들에게는 학교졸업 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에 한해 이용을 하고 그마저 이용기간이 끝나면 생활시설이나 집에 있게 되어 장애인 당사자 삶의 질의 저하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 기존의 대가족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핵가족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구성원의 가정내 부양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부양을 강화시키는 장애인 보호체계가 필요함.
- ◇ 부천시 학령기 연령(0-20세)과 6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지적, 자폐성, 뇌병변(1~2급) 장애인 수는 총 2,666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잠재적인 이용자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부천시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0개소 이용자 145명으로 잠재적 이용자 수 대비 5.4%만이 이용 가능한 현실임. 특히 10개소 시설 대기자 수는 353명으로 전체 이용자 수의 2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시설 이용을 위한 평균 대기기간 또한 최소 몇 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주 시 낮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저히 미비함.

제안내용

1. 중증장애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총 3개(150명) 신설과 함께 지원체계 구축

제안3

동 주민센터 내 장애인 문화여가예술활동 프로그램 개설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장애인들의 문화·여가예술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장애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와 제공기관의 부족함. 따라서 문화·여가예술 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57.1%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1%가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30.7%가 경제적 부담 때문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 부천시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의 공예, 서당, 기타 및 노래 교실, 에어로빅 및 댄스, 헬스, 글쓰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장애인의 문화·여가·예술 활동의 향유 및 접근을 저해하고 있음.

- ◇ 심리적, 환경적 접근성이 용이한 동(洞) 주민센터 내의 장애인 문화·여가·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동 주민센터의 주 역할과 기능인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복지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제안내용

1. 10개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설
(2018년도 전 행정복지센터 내 상시 프로그램 개설)

2. 36개 동 주민센터 내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설
(2019년도 동 주민센터 내 상시 프로그램 개설)

X. 정신장애인복지 분야

제안1

정신장애인 독립주거 지원주택 설치 필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1,200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합치면 약 4,000 - 6,000명 정도로 추산됨. 3인 가족 체제를 고려하면 중증정신질환으로 고통받은 정신장애인과 가족은 12,000명 - 18,000명 정도 이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를 촉진시키고 지역에 계신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병원 탈원화 - 집 또는 공동생활가정 - 독립주거로 연계하여 주거를 지원하는 안정적 주거시스템이 필요함.
- ◇ 정신장애인들이 탈원화가 되면서 1차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자신의집과 공동생활가정임. 그러나 공동생활가정은 거주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있어 지속적 거주가 어렵게 되어 있음.
- ◇ 지역에서 거주하는 성인 정신장애인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자립을 준비해야 하기에 자립을 위한 독립주거시설이 필요함.
그러기에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사후와 공동생활가정 이후 독립주거를 할 수 있는 지원주택이 필요함.

제안내용

1.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사람이 살수 있는 정신장애인 독립주거 지원주택 설치
: 부모님이 연로하시어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정신장애인과 공동생활가정 3년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퇴소한 정신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주거 지원주택을 설치하여 지원해야 함.

제안2

부천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 필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1,200명이며 등록되지 않은 정신장애인은 약 4,000 - 6,000명 정도임(부천시 인구 대비 정신질환 평균 유병률 0.5%). 이 중 100명 정도만 3개 시설의 재활기관을 이용하여 재활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 정신재활시설 2개소만 있기 때문에 재활기관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임.
- ◇ 기존의 3개 기관에서 정신장애인의 상황에 맞게 재활이나 취업을 지원함. 그러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취업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분들에게는 보호작업으로 재활 과정을 촉진시켜야 함. 그러나 부천시에는 정신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인 직업재활시설이 전무한 상태임.
- ◇ 부천시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설립되어 있지만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약칭)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에 제한을 받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부천시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함.

제안내용

1. 부천시가 설립하여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위탁 필요
: 정신건강복지법(약칭)의 직업재활 시설을 설치하여 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생산적 보호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2. 법인 및 개인이 직업재활 시설을 직접 설치 신고할 경우 추경을 통한 3개월 이내 즉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Ⅺ. 지역사회복지 분야

제안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경상보조금 현실화 방안

제안배경 및 필요성

부천시 사회복지관의 경상보조금은 2015년 동결, 2016년 1.2% 삭감, 2017년 및 2018년 삭감으로 동결인데 반해, 2015년 물가상승률은 1%, 2016년 1.2%, 2017년 1.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최저임금(시급) 역시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2015년 대비 8.1%상승), 2017년 6,470원(2016년 대비 7.3%상승), 2018년 7,530원(2017년 대비 16.4%상승)으로 최저임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이렇듯 생활전반의 물가 및 임금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보조금의 동결 또는 삭감유지로 복지관 공공요금 및 운영경비의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음.

그동안 경상보조금 수입으로 인건비, 운영비 일부를 충당해 왔으나 현재는 운영비는 물론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임(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를 적용, 해마다 인건비 상승률은 2.5%임). 따라서 이전에는 무료사업비 확보만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인건비 지급 및 운영비 지출을 위해 법인전입금 뿐 아니라 비지정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사회복지관은 이미 종사자 인건비가 경상보조금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원들이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후원금을 확보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 이에 부천시내 사회복지관은 인건비 및 운영예산의 절감을 갖고자 기존 직원의 퇴직시 경력이 있는 직원의 채용보다는 신입직원의 채용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서울 및 광명, 시흥, 고양시와도 임금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양질의 인력의 채용이 어려워짐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천시내 사회복지관은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관이 많은데 인건비 부족 결과, 우수한 인력이 이동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음.

또한, 사회복지관의 노후에 따른 시설보강이 요구되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2016년 경기도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일몰사업으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몇 년간 부천시는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음.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안전예방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보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수탁 및 직영기관은 자체 기관에서 시설유지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능보강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재 부천시내 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의 부족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조차 경상보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복지협의체 발족, 경기침체, 마스크를 통한 후원금 오남용 문제 지적 등으로 후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일반 지역주민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접근성 등이 떨어져 시설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태임.

이렇듯 재정적으로 다른 단증복지관 및 생활시설에 비해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시설의 기능보강의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시설 안전관리는 시와 수탁(직영포함)시설의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내용

1. 경상보조금 지원 현실화(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
2. 종사자수당 지급(단종복지관 및 시설에 지급되고 있는 종사자수당이 사회복지관만 지급되지 않고 있음) 및 시간외수당 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지급 보장
3.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원을 통한 운영의 적합성 요구
4. 시민의 인권보장과 욕구에 기반을 둔 적절한 사회복지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기준 모형 마련
5. 사회복지관 특성에 맞는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현실화
6.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예산 배정 필요
7. 안식년, 안식월 적용 : 장기근속으로 육체적, 정신적 소진이 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휴식년, 휴식월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 정신적, 신체적질환 예방
8. 종사자 포상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부천시장상
9. 종사자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
10. 대체인력 보장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 보장 및 사회복지 업무의 지속성 보장
11. 공무원 연수원 등 연수장소 지원
12. 시민의 인권보장과 욕구에 기반을 둔 적절한 사회복지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기준 모형 마련

제안2

부천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체계 현실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행정센터 개편에 따른 권역변경(2016년 7월)

- 행정센터 권역(하위동) 현황

- 원미구 : 4개 권역 → 5개 센터(전 권역 관할 동이 전체 변경)
 - ▶ 2권역 해당 복지관 없음, 3권역 거점복지관 2개소 소재
- 소사구 : 2개 권역 → 3개 센터(2개 복지관에서 3개 센터 담당)
- 오정구 : 2개 권역 → 2개 센터(2개 복지관에서 2개 센터 담당, 변동 없음)

[권역별 / 행정센터 별 현황]

현재(복지동)		
권역	관할동	모집기관
1	춘의동	춘의복지관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2	중4동	한리복지관
	원미2동, 상1동, 상2동, 상3동, 중1동	
3	도당동	덕유복지관
	약대동, 중2동, 중3동	
4	중동	상동복지관
	상동,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변경(행정센터)		
센터	관할동	모집기관
1	원미1동	춘의복지관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도당동	
2	심곡2동	상동복지관 덕유복지관
	심곡1동, 소사동, 심곡3동, 원미2동	
3	중4동	덕유복지관 한리복지관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4	중동	상동복지관
	상동, 상1동	
5	상2동	한리복지관
	상3동	

⇨

5	소사본동	부천복지관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6	심곡본1동	심곡복지관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6	심곡본동	심곡복지관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7	소사본동	부천복지관
	소사본3동	
8	괴안동	부천복지관
	범박동, 역곡3동	

7	원종2동	원종복지관
	오정동, 원종1동, 신흥동	
8	고강본동	고강복지관
	성곡동, 고강1동	

9	성곡동	고강복지관
	고강본동, 고강1동	
10	오정동	원종복지관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 색깔별로 현재 담당 동을 표시

◇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의 무한돌봄 사례관리 권역 담당으로 인한 문제

2016년 7월 행정센터 개편에 따라 무한돌봄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행정센터 담당 기관으로 배정이 되었음.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중심의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사례관리를 위해 해당지역이 아닌 먼거리의 지역으로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시간적, 인력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짐. 특히 소사 지역이나 오정 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미 지역에서의 행정센터 중심으로 두 개 복지관이 관할·분리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 외 타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지역 부여

종합사회복지관 외 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특정대상(노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지어 사례관리를 진행함으로 해당 대상자가 아닐 경우 사례관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모든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정하여 사례관리 지역을 부여하고 역할을 주는 것은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낮아지게 함. 사례관리는 한 개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가정을 대상으로 보아야 함. 그러므로 무한돌봄 시스템을 중심으로 권역을 배정하는 것이 아닌 행정센터 내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여야 함.

제안내용

1. 행정센터 내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민관협력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2.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루어진 무한돌봄 시스템 타 사회복지시설로의 확대

제안3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방안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우리나라는 지속적 경제난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약한 사회안전망 체계의 강화와 보편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확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 현재 우리사회는 성장 없는 고용상태이며, 특히 청년의 구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 NEET⁷⁾율은 18.5%로 OECD 평균 15.5%보다 3.0% 높게 나타났음. 2016년에는 18.9%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6년 통계청이 집계한 e-지방 지표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 실업률이 4.8%로 경기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청년 NEET 개인의 삶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청년 일자리 창출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저소득취약계층 별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부천지역은 청년지원정책이 시작단계이며, 저소득취약계층 맞춤 진로 및 취업지원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저소득 청년의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NEET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부천시의 공공시장영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부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시행과 저소득취약계층 청년 맞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일정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과 연계한 공공영역시장 서비스 사업의 개발이 요구되어짐.

제안내용

1. 저소득취약계층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부천지역 청년특화형 사업 시행

-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플랜사업을 공공시장 사업 및 지역특화형 지역 사회 서비스사업 확대로 취업취약계층의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 및 확대가 요구됨.
-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희망플랜사업은 2016년 4월부터 중위소득 50% 내외의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청년(14~24세) 100명을 선정하여 다양한 진로체험활동과 심리정서지원, 인문학코칭, 학업·예체능지원, 직업훈련 및 취·창업준비 지원과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부모교육과 부모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였음. 또한 50여명의 마을활동가를 발굴·양성하여 당사자들과 1:1 또는 1:2연결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는 당사자들의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척도점수가 사업전보다 상승하였고, 상급학교 진학, 취업 및 인턴십 활동과 자격증 취득과 100명 모두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NEET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음. 희망플랜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

7) NEET 개념 :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취업, 교육, 훈련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층(15~29세)을 의미함

국사회복지관협회 3년 지원사업으로 2018년 12월로 사업이 종결예정임. 이에 지역사회 청년 NEET 문제해결과 저소득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부천시의 정책마련이 요구됨.

- 저소득취약계층의 청년들은 진로 및 직업경험의 부재로 인해 비전을 갖지 못하므로 이를 대체할 다양한 경험 제공이 필요함. 진로를 결정한 청년에게는 그에 맞는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개인의 취업역량을 높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계해야 함.
- 저소득취약계층 청년이 성장하는 과정 중 지지해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함. 지역사회 청년 진로멘토를 발굴·양성하여 청년과 연결해줄 수 있는 인력풀 구축이 필요함.

2. 저소득취약계층 청년의 NEET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저소득취약계층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진로를 찾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희망플랜사업이 지역사회에 확대·운영되어야 함.

제안4

구도심권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주거권 확보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구도심권은 대체로 비좁고 건축연도가 오래된 낡고 허름한 주거여건에 놓여 있음.
- ◇ 현재 구도심권은 뉴타운이 취소된 이래, 재건축이 우후죽순으로 난립, 건축되고 있어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은 날로 치솟고 있음.
-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소년소녀가장,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등)은 전월세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거시설이 더 낙후된(외곽, 반지하 등)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있는 실태임.
- ◇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현 거주지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누수, 곰팡이, 통기, 가스 및 전기 안전상태 등).

제안내용

1. 퇴거위기세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저소득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세대 중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 세대
 - 지원내용 : ① 퇴거로 인한 신규주택 보증금 저리지원
② 소년소녀가장세대 특별공급
2. 저소득층에 대한 지자체 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공급
 - 내 용 : 경기도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지자체(부천)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3. 주거복지센터 확대
 - 내 용 : 각 구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주거지 중심의 복지체계의 기반마련
4.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사업 지원
 - 지원분야 : 도배, 장판, 방충망, 화장실 개보수, 누수
 - 지원사항 : 분야별 20만원 한도 내 시설 보수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 저소득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세대
5. 노후주택 원클릭 예방점검서비스
 - 지원내용 : 가스 누수탐지 연 4회, 보일러 점검 연 1회, 누수점검 연 1회
 - 지원대상 : ①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 저소득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세대 중 ② 건축년도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자

제안5

수급노인 기초연금 보장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기초연금법과 현실

기초연금법은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임.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 약 40만명의 노인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임.

◇ 보충성의 원리

현재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30%, 현재 1인 가구 생계급여는 49만원)기준으로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정부는 수급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29만원만을 지급하고 있음.

◇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 간의 격차 확대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오히려 최빈곤 계층인 수급노인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임.

제안내용

1.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XII. 청소년 분야

제안1

오정지역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청소년 정책,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와 참여활동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청소년시설 현황

구분	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카페	상담복지센터	기타	합계
원미 지역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도당청소년카페	부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미분소(상동) 오정분소(도당동)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8개소
소사 지역	소사청소년수련관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소사청소년카페	소사분소(송내동)	모퉁이쉼터	5개소
오정 지역	-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	-	-	1개소
합계	3개소	3개소	2개소	3개소	3개소	

- ◇ 전체 14개소 중 8개 시설이 원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사지역은 5개소, 오정지역은 1개소가 운영 중이어서 오정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와 참여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 ◇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시/군/구마다 청소년수련관 1개소씩 각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씩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오정지역은 모두 법적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부천시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오정분소가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구역상 원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오정지역의 청소년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움.

제안내용

- 오정지역에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 1순위 : 청소년문화의집 / 2순위 : 청소년 카페
-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정분소 이동 설치
 - 현재 원미지역인 도당동에 설치되어 있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정분소를 원종동이나 성곡동 등 오정지역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의 이동 설치

제안2

청소년(보호,복지,활동)시설의 운영안정화를 위한 시설 운영인력의 현실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 인구의 감소 추세는, 고령화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의한 인구절벽현상으로 청소년 세대의 역량 개발에 대한 투자와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함(부천시 청소년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조사연구, 2017).
- ◇ OECD 국가와의 비교 연구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은 주관적인 행복지수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 국제비교 연구조사 결과보고서, 2017)있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함.
- ◇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 가족해체와 가족기능 약화, 학교부적응과 학교이탈에 따른 청소년 비행율 상승은 사회 전반의 안녕을 위협하는 수준임.
- ◇ 청소년의 역량개발 · 체험활동 · 보호 · 복지에 대한 부천시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확대가 지역발전의 기본토대가 됨.
- ◇ 청소년기관 및 시설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상황임.

	2014년	2018년	비고
계	8개소	14개소	
청소년활동시설	5	8	청소년카페포함
청소년복지시설	3	6	

- ◇ 청소년 시설은 증가하였으나, 시설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 청소년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종사자의 배치관리 최소 기준 대비 전체 직원 수는 43% 확보(정규직 직원 수는 74% 확보)로, 전체 인력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법적 의무화 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는 직원 확보 수준과 청소년지도사 확보 수준이 주요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음).
- ◇ 기관 특성상 관련법과 지침을 준용한 인력 확보와 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지의 분석이 필요함.

※ 부천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 카페 포함) 인력 현황

시설명	수용정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최소 기준			부천청소년활동시설 직원수 현황 (2018년 3월 기준)		
		전체 직원수	정규직 직원수	정규직 청소년 지도사수	전체 직원수	정규직 직원수	정규직 청소년 지도사 수
무지개카페 소사점	50명	2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1명	0명	0명
무지개카페 도당점	70명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1명	0명	0명
부천여성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200명	8명 이상	6명 이상	3명 이상	4명	4명	3명
송내동청소년 문화의집	200명	8명 이상	6명 이상	3명 이상	8명	6명	6명
고리울청소년 문화의집	250명	10명 이상	8명 이상	4명 이상	9명	9명	8명
부천시산울림 청소년수련관	300명	12명 이상	9명 이상	5명 이상	12명	10명	7명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400명	16명 이상	12명 이상	6명 이상	7명	6명	6명
부천시소사 청소년수련관	700명	28명 이상	21명 이상	11명 이상	15명	12명	10명
계	2,170명	130명 이상	66명 이상	34명 이상	57명 (43%)	49명 (74%)	40명 (117%)

※ 수용정원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상의 수용정원

※ 전체 직원 수 : 수용정원대비 전체 직원 수를 최소 4% 이상 확보

※ 정규직 직원 수 : 수용정원대비 전체 직원 수를 최소 3% 이상 확보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는 가능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 수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를 최소 1.5% 이상 확보

※ 여성가족부의 사회적일자리창출 관련 배치인력은 제외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인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 등)

제안내용

1. 청소년시설(보호·복지·활동)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적정 인력 확보 계획 수립
2. 각 기관의 특성상 관련법과 지침을 준용하여 인력 확보

제안3

청소년 전담 부서의 신설과 전담인력 증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부천시는 총인구 849,143명 중 9세~24세의 청소년 정책 대상 인구가 159,395명(18.7%) [2016. 12. 31 기준] 으로 전국 인구(18.41%) 대비 부천시 비율이 약간 높은 상황임.
- ◇ 또한 부천시 인구의 감소 추세는, 고령화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의한 인구절벽현상으로 청소년 세대의 역량 개발에 대한 투자와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함 (부천시 청소년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조사연구, 2017).
- ◇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①항에 따르면 시·군·구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전문개정 2014.3.24.].
- ◇ 현재 부천시의 청소년정책은 여성청소년과에 청소년육성팀(팀장 포함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팀에서 청소년 보호·복지·활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청소년기관 및 시설의 증가로 청소년육성팀의 업무량 과다와 능률성 저하가 우려됨.

	2014년	2018년	비 고
계	8개소	14개소	
청소년활동시설	5	8	청소년카페포함
청소년복지시설	3	6	

- ◇ 청소년육성팀의 업무과중과 순환보직에 따른 정책수립 및 수행 기능에 어려움이 있음.
- ◇ 청소년의 역량개발·체험활동·보호·복지에 대한 부천시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확대가 지역발전의 기본토대가 됨.

제안내용

1. 청소년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청소년정책 강화
2. 부천시의 청소년 정책수립과 수행기능 강화를 위한 청소년 전담부서의 신설
3. 청소년 정책 실현을 위한 인원 보강 및 청소년전담공무원 배치

	현재	대안(안)
조직구조	* 여성청소년과 : 여성청책팀, 건강가정팀, 다문화가족팀, 청소년육성팀	* 청소년과 신설 : 청소년보호팀, 청소년복지팀, 청소년활동팀
인 원	5명(청소년육성팀)	증원(2인이상 전담공무원)

참여단체 현황

[별첨]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 제안 참여단체 현황

I. 노인복지 분야

연 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 고
1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이덕수	347-9534	
2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김정은	683-9290	
3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장기욱	667-0261	
4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조재일	322-1203	
5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성일	683-1389	
6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이승주	663-9577	
7	부천시니어클럽	권치영	668-4108	

II. 다문화 분야

연 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 고
1	(사)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344-1412	
2	국경없는친구들(역곡)	김혜숙	345-6734	
3	복된한국어학당	박휴선	611-6171	
4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정근철	679-2900	
5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박명옥	327-1370	
6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송연순	348-7575	
7	부천필벽기념관	학예사 김현수	668-7565	
8	별사랑이주민센터/별사랑어린이집	전가별, 김관영	676-7812	
9	세계로지역아동센터	김수정	676-7086	
10	삼성종합사회복지관	방찬일	323-3162	
11	심곡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김은정	665-6061	
12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이완	684-0244	
13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부	이옥녀	323-2472	
14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테크노파크사무소	실무자 이주연	321-1310	
15	한국필벽재단	권택명	207-7179	

III. 문해교육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 고
1	고강동성당	정성일	683-2913	
2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	677-9090	

3	덕유사회복지관	홍갑표	325-2161	
4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정근철	321-1310	
5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이덕수	347-9534	
6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김정은	683-9290	
7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장기욱	667-0261~4	
8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이명위	349-3100	
9	삼성종합사회복지관	방찬일	323-3162~3	
10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정성기	652-0420	
11	새롬가정지원센터	오세향	070-4147-5186	
12	삼곡종합사회복지관	염범석	665-6061	
13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왕정찬	677-0108	
14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655-6133	
15	삼성노인참여나눔터	조송옥	010-7128-7686	

IV. 보건의료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광호	675-7517	

V. 사회적경제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부천시사회적경제협의회	조인검	625-2992	

VI. 아동복지 분야

연번	지역아동센터명	센터장	연락처	비고
1	새롬지역아동센터	김경희	671-2354	
2	도깨비지역아동센터	김춘식	655-6638	
3	새날지역아동센터	김정희	675-0104	
4	살롬지역아동센터	정화자	613-3335	
5	원미지역아동센터	한매역	614-8439	
6	원미1동우리배움터지역아동센터	김미숙	656-0673	
7	중동우리배움터지역아동센터	김미숙	655-0672	
8	성산지역아동센터	전명자	672-8291	
9	영성지역아동센터	이은실	675-0175	
10	역곡지역아동센터	박은희	351-0407	
11	사랑의지역아동센터	한혜선	657-0153	

12	라이프지역아동센터	이창수	677-3984	
13	보람지역아동센터	최영신	328-0193	
14	1318HappyZone우리지역아동센터	이향숙	668-1318	
15	민들레지역아동센터	김소운	611-0101	
16	한울지역아동센터	한희정	261-1133	
17	서부지역아동센터	송민규	613-7656	
18	세계로지역아동센터	김수정	676-7086	
19	다정한지역아동센터	유정숙	348-2234	
20	그린지역아동센터	김종옥	677-3033	
21	원미산지역아동센터	이주연	347-5678	
22	우리세상지역아동센터	채수희	678-0671	
23	충만지역아동센터	최은영	070-8281-7237	
24	오순도순지역아동센터	마종열	661-1829	
25	행복플러스지역아동센터	최정인	657-0192	
26	심곡지역아동센터	김상훈	612-1997	
27	도담지역아동센터	김유화	341-1573	
28	이웃사랑지역아동센터	배영옥	345-2540	
29	한세지역아동센터	조경자	614-0691	
30	더높이지역아동센터	박현웅	347-3332	
31	부천지역아동센터	송인섬	664-9192	
32	샘터지역아동센터	박희주	611-9966	
33	솔로몬지역아동센터	박한나	347-0754	
34	송내지역아동센터	채경아	656-0671	
35	다음지역아동센터	조윤정	663-5497	
36	꿈뜰지역아동센터	박정란	611-1355	
37	솔안지역아동센터	이영희	070-7404-1318	
38	녹색지역아동센터	이재화	341-0308	
39	범박공부방지역아동센터	지부예	344-0056	
40	가람지역아동센터	이혜란	655-0428	
41	소사지역아동센터	박성균	346-9077	
42	애솔지역아동센터	이은우	070-7404-1319	
43	우리나라지역아동센터	이주연	349-0680	
44	신광지역아동센터	구자춘	655-1615	

45	해오름지역아동센터	이영옥	347-4507	
46	동산지역아동센터	김효순	070-4137-6276	
47	오정동지역아동센터	안현진	679-5979	
48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장미화	671-1442	
49	지구촌지역아동센터	김옥미	201-7736	
50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정혜정	675-8967	
5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김영숙	676-9786	
52	좋은터지역아동센터	이영모	677-1574	
53	영광지역아동센터	김경희	674-5073	
54	한우리지역아동센터	강신경	674-0191	
55	경서지역아동센터	박리라	684-8250	
56	예심지역아동센터	정연숙	677-5887	
57	골든벨지역아동센터	양정애	674-1421	
58	고강꿈지역아동센터	송영흠	672-0196	
59	한결지역아동센터	최향숙	672-1070	
60	비전지역아동센터	윤현주	070-8230-8993	
61	고강동지역아동센터	이은형	681-0004	
62	삼정지역아동센터	김인경	676-0079	
63	원종지역아동센터	박효순	677-0438	
64	모나쉬지역아동센터((구)대장동)	이선경	676-8878	
65	이레지역아동센터	조복인	070-4964-9737	

Ⅶ. 자활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 고
1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박동옥	323-9946	
2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송예순	349-2355	
3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박혜준	654-7399	

Ⅷ. 작은도서관 분야

연번	도서관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 고
1	복사꽃필무렵도서관	염범석	665-6053	
2	도란도란작은도서관	최종복	679-9702	
3	민들레흠씨작은도서관	이현순	322-9702	

4	행복한도서관	정근철	679-2907	
5	약대가족도서관	이원돈	682-5800	
6	사랑나무가족도서관	박중현	661-3034	
7	꿈나무가족작은도서관	주소희	345-5919	
8	햇살이가득한작은도서관		652-3172	
9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661-8366	
10	꿈꾸는새싹도서관	왕정찬	677-0162	
11	무지개작은도서관	왕정찬	342-0108	
12	시온고 도서관	김기찬	340-0194	
13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방찬일	323-3160	
14	글마루작은도서관	이선근	346-3451	

IX. 장애인복지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 고
1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복기	670-1100	
2	부천혜림요양원	임성현	666-7990	
3	부천혜림원	권미영	666-7990	
4	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	이한형	611-7994	
5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남권우	671-2500	
6	샘물자리	정현주	662-2755	
7	사랑이야기	김병관	719-2369	
8	그루터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금순	322-6644	
9	실로암장애인주간보호시설	조성욱	328-0339	
10	아름다운집주간보호시설	홍종성	348-9292	
11	우리동네부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조영미	665-6603	
12	희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희찬	070-8692-7006	
13	하늘아래장애인주간보호시설	권은미	349-6828	
14	부천사랑터주간보호시설	권희현	212-8749	
15	물댄동산주간보호시설	전명진	345-6966	
16	안다미주간보호시설	신건식	216-1202	
17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센터	김복기	670-1136	
18	기쁨의샘	김복기	322-3306	
19	사랑의샘	김복기	325-3465	
20	혜림그룹홈 1호	권미영	666-7990	
21	혜림그룹홈 2호	권미영	666-7990	
22	혜림그룹홈 3호	권미영	666-7990	
23	혜림그룹홈 4호	권미영	666-7990	
24	혜림그룹홈 5호	권미영	666-7990	

X. 정신장애인복지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동광임파워먼트센터	김장배	323-3206	
2	부천공동희망학교	송평순	679-1901	
3	세친구	류선영	662-3379	
4	쉐어하우스	변가윤	349-3312	

XI. 지역사회복지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	677-9090	
2	부천시덕유사회복지관	홍갑표	325-2161	
3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이명위	349-3100	
4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방찬일	323-3162	
5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정성기	652-0420	
6	심곡종합사회복지관	염범석	665-6061	
7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왕정찬	677-0108	
8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653-6131	
9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오혁환	324-0723	

XII. 청소년 분야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김미희	325-4300	관장대행
2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이용민	344-4459	
3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유승중	344-0720	
4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신용식	682-1886	
5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조윤령	656-8085	
6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수경	665-0924	
7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김이광민	655-4620	
8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홍구	325-3002	
9	부천시모퉁이청소년쉼터	배지영	347-1880	
10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한태경	654-1318	
11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박성숙	322-0700	

6.13 지방선거 부천시
사회복지정책 제안집

발행일 2018. 5.

발행처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주 소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303번길 8,
청원프라자 403호
전 화 (032) 662-7713 / 팩스 0505-718-7713
E-Mail bccsw@naver.com

